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대응

이 준 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팀장 (junkyul@kiep.go.kr, 3460-1128)
 김 종 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3460-1193)
 고 희 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hcko@kiep.go.kr, 3460-1086)
 오 민 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moh@kiep.go.kr, 3460-1190)

1. 개요
2.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방향
3.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전망
4.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주요 내용

- ▶ 11월 4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제44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음.
- 오바마 대통령 당선은 '위기의 미국 경제'와 이에 대한 '원인 진단 및 정책적 대안', 그리고 '위기 해결능력'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와 선택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 선거 결과,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일체된 정부'(united government)가 탄생하게 되어,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정책, 주요 대선 공약 등이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 및 미국 경제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공정(fair) 자유무역'으로 전환, 엄격한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한 새

로운 국제무역협정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준비되어야 함.

- ▶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한·미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 기회와 향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공조 및 협력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양국간 통상관련 이슈 증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준비되어야 함.
- 오바마 행정부가 녹색성장 산업을 통한 경제위기 탈출, 고용 창출, 혁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의료제도 개혁을 통한 복제약 수입·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우리 국회의 한·미 FTA 2008년 내 통과 적극 추진 필요
- 한·미 FTA의 2008년 국회 통과를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신속한 추진, 미국 시장 선점 효과,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대미 통상정책의 레버리지 확보에 기여할 것임.

1. 개요

■ 11월 4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제44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음.

-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위기의 미국 경제'와 이에 대한 '원인 진단 및 정책적 대안', 그리고 '위기 해결능력'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와 선택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선거 결과,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일체된 정부'(united government)가 탄생하게 되어, 미국 실행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정책, 주요 대선 공약 등이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 및 미국 경제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의 실행정부는 경제, 통상, 녹색성장, 의료정책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방향, 주요 정책 전망 등을 통해 오바마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함.

2.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방향

가. 민주당의 정책 방향

■ 민주당은 콜로라도 덴버(8월 25~28일)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약속을 쇄신하며(Renewing America's Promise)"라는 집권 청사진을 담은 정강정책을 확정)함.

- 동 정책은 ① 중산층가구의 세금감면과 에너지효율 향상, ② 세련되고 강력한 공정무역, ③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인간적인 이민개혁, ④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선도적 역할유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지지, ⑤ 16개월 내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⑥ 모든 미국인을 위한 우수하고 수준 높은 의료보장 제공, ⑦ 낙태권리 인정 등을 포함.

표 1. 민주당 정강정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경제 정책	- 세제개혁: 소득 25만 달러 이하 중산층가구에 대한 세금감면과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 - 에너지: 2030년까지 기업, 정부 및 모든 미국인에게 에너지효율을 50% 향상시키도록 요구함. 2025년까지 전력의 최소 25%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
무역 정책	- 세련되고 강력한 공정무역 정책(Smart, Strong, and Fair Trade Policies) - 외국의 시장개방 보장과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을 준수한 자유무역협정 지지
이민 정책	-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인간적인 이민개혁 - 새로운 이민개혁법을 통해 민주당은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과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한반도 정책	-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 유지: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과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 - 북한 비핵화: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에 대해 검증 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모든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통해 파트너들과 협력
외교 정책	- 이라크 철군(16개월 내 이라크 미군 재배치) 및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추구 - 이란 핵문제 :고위급 직접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
의료 정책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절하고 우수한 의료보험 제공
기타	- 낙태권리 인정 및 여성권리 신장

주: 2008년 민주당 정강정책(Renewing America's Promise)을 토대로 작성

나. 오바마 정책의 기본 방향

1) 경제 및 외교 안보 주요 방향

- 오바마는 경제분야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정책,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1) 민주당은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강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전국 50개주에서 1,600여 차례 모임을 열어 정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 각계각층에서 약 3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힘. 동 정책안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장으로 구성되었는바, ① 미국의 이상을 쇄신하며(Renewing the American Dream), ② 미국의 리더십을 쇄신하며(Renewing American Leadership), ③ 미국의 커뮤니티를 쇄신하며(Renewing the American Community), ④ 미국의 민주주의를 쇄신하며(Renewing American Democracy)임.

2) 대선 이슈와 오바마 정책의 기본 방향

- 2008년 미국 대선 이슈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위기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향후 실물경기 침체 우려였음.
- 주택시장 침체, 금융위기, 주가하락, 소비 및 고용 위축 등으로 이라크철군, 대테러전과 같은 외교·안보 이슈보다는 경기부양이 미국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됨.
- 그 외 이슈에 대해 오바마는 16개월 내 이라크 내 미군 철군 완료,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 낙태인정,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녹색성장전략,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인간적인 이민제도 개혁,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등을 제시함.
- 오바마는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지만, 세계화가 미국의 부(wealth)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이를 위해 변화해야 함을 주장함.
- 자유무역이 미국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 이익과 미국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는 인정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상실, 낮은 임금의 서비스 일자리, 소득 양극화 등의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

- 오바마의 조세정책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에 중점을 둠.
- 6개 소득등급 중 하위 4개 등급의 소득세율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상위 2개 등급의 소득세율은 인상하는 등 고소득 가정의 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
-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고령자에 대해 소득세 면제 추진

표 2. 오바마의 경제정책

정책	주요 방안
경제회생 방안 (경기해법 및 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부양 ○ 중산층과 근로자층에게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회복 방안 제시(1억 5,000만 근로자에게 일인당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 세금환급) - 가계 및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조기(59.5세 이하)인출에 대한 위약금 면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600억 달러 규모의 대책 제시 -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및 실업수당 과세 유예와 정규직 채용기업에 대해 1인당 3,000달러 세금공제 -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 확대, 지방 및 주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조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가정의 세율 인상을 주장(6개 소득등급 중 하위 4개 등급의 소득세율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상위 2개 등급의 소득세율은 인상) ○ 개인소득세 과거 최고세율 39.6%로 복귀 지지(현행 35%)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상속세 2009년의 계획된 수준 유지(2001년 감세안에 따라 면제기준을 2008년 200만 달러→350만 달러로 확대, 최고세율 45%) -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의 최고세율 인상(15%→20%)

주: 오바마의 대선공약(Blueprint for Change: Obama and Biden's Plan for America)을 토대로 작성, 이하 동일

3.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전망

가.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1) 경제정책

- 오바마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지출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함.
- 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부양과 가계 및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
- 또한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정규직 채용기업에 대해 1인당 3,000달러 세금공제, 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지방 및 주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

2) 금융개혁 정책

-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미국의 신행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
-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위기에 대해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정부가 지지하는 경제철학(2)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2)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9월 15일 공화당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 금융개혁에서 투명성 강화, 위험 관련 정보의 최대 공개, 신용평가기관 개혁, 회계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기관의 다양화로 인한 관리·감독의 효율성 부재 인식하에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다양화된 여러 금융 감독기관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전망됨.

- 부시 행정부에서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감독기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3) 고용확대 정책

■ 민주당 신행정부는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투자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 선진제조업기금(Advanced Manufacturing Fund)을 조성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에 사용토록 하고, 제조업확대파트너십(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펀드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신기술 개발 및 관련 회사의 성장동력 확충에 지출할 예정

- 사회간접자본재투자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을 설립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 창출을 목표

■ 녹색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500만 고용 창출 공약)을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동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고용 창출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고, 2010년까지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기업의 신규 근로자에게 1인당 3,000달러의 세제지원을 약속함.

나. 대외통상정책 및 전망

■ 오바마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믿으면서도 향후 미국 근로자의 고용 증대, 공정한(fair) 노동 및 환경 정책 확신을 위한 FTA 추진을 표명함.

- 자유무역이 미국 소비자의 이익,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상실, 소득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강조

표 3. 오바마의 대외통상정책

구분	주요 내용
대외통상정책	- 세련되고 강력한 공정무역 정책(Smart, Strong, and Fair Trade Policies)
	- 외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을 준수한 자유무역협정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가 미국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 이익과 미국경제의 성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미국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었다는 인식
	- 미국 근로자의 고용과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
	- 무역대표부(USTR)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시켜 외국의 무역협정 이행을 강화하고, 미국 근로자의 이해를 보호하며, 노동과 환경이 강화된 자유무역협정 추진
	- 자유무역 및 개방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서비스산업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

■ 공정한 자유무역(Fair FTA)을 강조하는 오바마의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지난 2007년 5월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신통상정책은 노동·환경 및 지구온난화, 특허·지재권 및 의약품접근, 정부조달, 항만보호, 투자, 전략적 근로자지원 및 연수프로그램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됨.

- 미국 근로자, 농부와 기업가를 보호하고,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미국의 제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무역협정의 체결을 제시

■ 향후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무역협정의 틀이 신행정부와 의회의 협의하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무역흑자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증대, 무역협정에 노동 및 환경 조항의 강화,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 등이 전망됨.

- 이에 따른 무역관련 분쟁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외국의 무역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무역대표부(USTR)의 이행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외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외면하고 감독·규제를 느슨히 하였으며, 기업의 CEO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장려해 왔다고 주장함.

다. 녹색경제성장 전략

- 오바마 행정부의 녹색경제성장 전략이 강화되고, 재생·대체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이 역할이 적극적으로 전환되면서 다자간 환경협정 및 무역협정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예상된다.
- 오바마 행정부의 녹색경제성장 전략은 재생에너지·청정 연료 개발 등 대체에너지 투자확대와 에너지효율성 증대로 요약됨.
 - 오바마 행정부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소비 35% 감축을 목표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이슈를 정책의 중심으로 부각시키며 다자간 환경협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시행정부가 서명을 거부했던 교토의정서의 재참여 논의가 활성화되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배기가스 감축,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고, 신기술그린 IT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됨.³⁾

표 4. 오바마 에너지정책

	주요 내용
기본정책기조	- 대체에너지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10년간 1,500억 달러 예산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2030년까지 석유소비 35% 감축)
연료효율성 증대	- 2028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
에탄올 보조	- 2030년까지 해마다 국내 생산 바이오 연료 600억 갤런 사용 제안
원자력 발전증대	- 조건부 찬성 -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제한적 찬성
석탄	- 청정석탄 지지 - 기존의 연료보다 이산화탄소가 20% 적게 배출된다면 액화석탄 지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	- 미국은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 입장을 견지해야 함.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 원칙적 찬성 - 강제적인 총량거래제를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이하로 감축

3) 조세 부과를 통한 배출가스량 조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라. 신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망

- 민주당과 신행정부는 IT산업 투자 촉진, 광대역 통신망 건설 등 IT분야의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IT부문에서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미국인이 접근 가능한 광대역 통신망 건설, IT기술서비스 향상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IT관련 연방정부 예산 2배 이상 확대, IT 낙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⁴⁾
-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와 함께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환경문제로 인해 향후 정보기술(IT)산업에서도 ‘그린 IT’⁵⁾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규제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대추세에 있는바,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가 없을 정도로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기술 효율 증대에 따른 정책으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자동차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마. 기타 주요 정책

1) 의료정책

- 오바마는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의료보험 비용은 낮추고 의료혜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료보험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을 살리고 의료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전자의료정보 시스템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보험 미가입자 또는 현행의 의료보험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공공의료보험’ 제도에 가입하게 하거나 다양한 민간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4)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IT 관련 정강정책 정리

5) 그린IT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유해물질 대체기술,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등 친환경 대체기술을 적극 활용한 응용 기술 부분임.

표 5. 의료정책

	주요 내용
기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플랜 추진 - 의료비는 낮추고 의료의 질은 향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정보시스템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의료 과실을 줄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 증대 - 질병관리프로그램과 통합예방케어를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비용 하락 추진 - 약제비 하락을 위해 복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공공의료보장제도에서 복제 의약품 사용을 적극 확대하며, 모든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의 약제비 협상 허용

- 또한 오바마 정부는 복제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공공의료 보험에서 복제약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약제비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2) 교육정책

■ 실행정부의 교육정책은 높은 수준의 교사 확보, 교사의 처우 개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등록금 부담 해소에 맞춰 질 전망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No Child Left Behind”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나,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 30%의 교사가 5년 안에 현직을 떠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질있는 교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임.

- 600만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여, 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함.

-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제도를 만들 예정임. 이를 통하여 국립 community college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국공립 대학(college와 university) 등록금에 대한 조세크레딧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3) 대외정책

■ 오바마는 취임 16개월 내 전투 병력을 전원 이라크로부터 철

군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이라크전 종식이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인 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입장

-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안하고 있음.

- ① 이라크 주변국가 내의 외교적 채널 구축, ② 미군의 주둔이 지역적 안정성을 해치는 인종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 ③ 인권문제에 대한 미래 지원 약속, ④ 난민들을 위한 기금모음, 전쟁범죄, 인류애에 대한 범죄, 학살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의결 선언 추진

■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도 동북아와 한반도 정책은 부시 행정부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관계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표 6.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

국가	정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경쟁국으로 표현, 무역불균형 및 지적재산권 침해 항의 - 환율 조작시 중국제품의 상계관세 부과하는 경제 제재
러시아	- 러시아의 호전적이고 패권주의적 행동에 맞서 유럽과의 공조를 다지는 Transatlantic 동맹을 체결하여 러시아를 견제
일본·호주	- 주요 동맹국으로 지칭
파키스탄	-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인도	- 인도의 핵 연료 구입 제한 추진

4.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 한·미 경제현안 및 전망

1) 한·미 FTA

■ 오바마는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10월 15일)에서도 한·미 간 자동차 무역 역조를 지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 자동차 협정결과 및 교역 불균형을 지적하였음.

- 오바마는 지난 5월 부시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를 “아주 결함있는”(badly flawed)협정으로 비난하였고, 자동차 무역 역조는 대선 경선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하였으며, 오바마의 측근들도 자동차 분야에 대한 오바마의 요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표명함.

■ 따라서 2009년 오바마 신정부 출범이후 한·미 FTA에 대한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특히 자동차협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 관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 실행정부의 제안이 정치적 수사로 끝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1993년(NAFTA)과 2007년(미·페루, 미·콜롬비아 FTA) 등 3차례에 걸쳐 재협상을 한 전례가 있음.

2) 무역구제 관련 규제정책 강화

■ 오바마 행정부는 협정 위반시 이행조치 강화를 위해 무역대표부(USTR) 내 이행부서의 인력 증원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상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됨을 의미하며, 미국의 취약산업이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반덤핑조치 발동 빈도 증대가 예상됨.

- 아울러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증대, 미국의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관련 규제정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과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잔존함.

3) 북한 비핵화

■ 오바마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단합과 공동 목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민의 국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의 적극 활용과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

표 6. 오바마 북한정책

대북정책 기본방향	-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발언	-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
	- 부시행정부가 만나기를 거부해 온 북한, 이란, 쿠바 등과 같은 지도자와 만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함(민주당 유튜브 대선 토론회: 2007년 7월 23일).
	- 이란 및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정책 선택 가능

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 미국 실행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공정한 자유무역”(Fair Free Trade)으로 노동 및 환경의 무역협정반영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외국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강화, 외국의 통상협정 이행 강화, 통상분쟁 증대, 의회의 보호무역 성향의 정책 반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어 통상분쟁의 사전적 예방과 미국 행정부와외의 긴밀한 통상협력 추진이 중요함.

■ 한·미 FTA에 대한 자동차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 요구를 막기 위한 양국간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미국 행정부로부터 자동차 추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FTA 외에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 우리 국회의 한·미 FTA 2008년 내 통과 적극 추진 필요

- 한·미 FTA의 2008년 국회 통과를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신속한 추진, 미국 시장 선점 효과,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대미 통상정책의 레버리지 확보에 기여할 것임.

-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여타 FTA 협상 타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확대 및 외국인투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청정 연료개발 등 대체에너지 투자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IT투자 증대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투자,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용할 전략이 필요함.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부시행정부의 서명을 거부했던 교토의 정서의 재참여 논의가 활성화되어 배기가스 감축, 배출권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 그러므로 한국기업이 친환경관련 기술, 신바이오에너지 기술, 배출가스 시장 활성화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전략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개발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친환경 공급망 구축·재활용프로그램 도입 등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함.
- 민주당의 IT정책은 IT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IT관련 대미 투자확대를 위해 R&D 센터 확보 등 산업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IT기술 전문기업, 친환경관련 기업, 신에너지기술

관련제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진출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의료보험 정책에 있어 오바마 정부는 미국 전국민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약제비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복제약 수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복제의약품 생산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약업체에는 새로운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이익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전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한국에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 기회와 향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공조 및 협력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양국간 통상관련 이슈 증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준비되어야 함.
- 또한 한국은 녹색산업·기술 등 새로운 산업 성장에 대비한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저탄소 산업의 성장 전략화에 선도적인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증대, 고용 창출, 수출 증대를 위한 정교한 노력이 필요함. **KIEP**